

제국의 기억을 보는 시선

— 서설적 성찰과 제국의 기억들

장인성 _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일본정치사상)

제국 기억의 출현과 제국-식민지

냉전 종식은 한때 미국에서는 ‘역사의 종언’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의 시작’을 의미했다. 일본의 전후체제를 규정한 냉전체제에서 망각되어 있던 ‘역사’—제국/식민지와 태평양전쟁의 역사—가 공공 기억의 장으로 소환되었던 것이다. 냉전의 언설공간에서 제국 경험은 냉전체제의 주도 세력에 의해 망각되어 있었고, 개인의 체험과 기억은 공적 영역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감성을 간직한 ‘제국’ 표상에 대한 기억은 이념 지형에 따라 갈려 있다. 진보는 제국주의와 침략을 상징하는 제국에 대한 기억을 부정하였다. 보수는 제국의 기억을 은밀히 유통시키면서 보수파들의 ‘망언’에서 보듯이 간헐적으로 제국을 정당화하곤 했다. 냉전이 끝난 뒤 상황은 바뀌었다. 진보에 압도당해 있던 보수는 국민과 민족을 강조하는 언어와 감정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냈고 국가 표상을 내걸고 ‘역사’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쟁 책임 논쟁은 제국의 기억을 논의하는 언설 공간을 만들어 냈다.

제국의 기억은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보는 관점뿐 아니라 일

본제국이 식민지 조선과 대만, 만주국, 중국, ‘대동아’에 연루된 양상을 보는 시선까지 포함한다. 물론 우리에게 일본제국-조선식민지 공간을 포착하는 시선이 문제다. 냉전체제 하의 일본 지식계에서는 ‘제국/식민지’ 구도에 기초한 이원론적 지배/피지배 의식이 제국 기억을 구축하였다. 냉전체제는 문서상으로 식민지 지배 청산을 허용하였고 제국에 관한 기억을 봉쇄하였다. ‘제국/식민지’ 틀에서 진보는 제국을 부정하였고, 보수는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를 가져다 준 제국의 ‘시혜’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있다. 다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제국을 하나의 세계 혹은 생활공간으로 놓고 제국과 식민지의 비대칭적 상호작용을 상징하는 ‘제국=식민지’ 틀도 부상하고 있었다.

‘진보-보수’ 이념구도와 ‘제국-식민지’ 인식틀은 탈냉전기 일본에서 제국 기억을 규정하는 두 인식론적 좌표축을 구성한다. 전쟁책임의 소재와 사회의 방식을 둘러싼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논쟁은 두 좌표축에서 제국일본과 전후일본을 어떻게 기억/망각할지를 따지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진보 지식인들은 제국을 망각하길 바라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후체제를 영원히 기억의 창고에 남겨 두고자 한다. 보수 지식인들은 전후의 민주주의체제=평화헌법체제를 미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요된 허구로 규정하면서 망각의 강으로 흘려 보내고 제국을 기억해 내고자 한다. 제국일본과 전후일본에 관한 기억은 전후체제의 진보주의 해석에 대한 보수파들의 반격에서 비롯된 전쟁책임론이라는 언설 투쟁을 통해 쟁점화되었다.

이 두 좌표축이 활성화한 것은 탈냉전과 지구화로 일본 국내에 위협과 불안감이 유포되고, 동아시아 경제발전으로 역내의 불균형이 현저하게 완화되면서 일본의 역내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맥락과 관련된다. 기억은 불균형 관계에서는 객관화되기 어렵다. 국제체제 수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동아시아 역내의 상대

적 균형과 상호 인정성이 높아지면서 역사 문제, 즉 기억의 문제가 부상했다. 가해자(일본)와 피해자(아시아) 사이에 균형과 소통의 가능성이 열렸을 때, 기억의 국제 정치와 기억의 국내정치가 착종하면서 제국의 기억은 문제화=공식화될 수 있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서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발생은 어쩌면 이를 매개하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제국 기억의 출현, 가해자-피해자 구도의 부상, 전쟁책임과 사죄방식의 쟁점화는 상관되어 있었다. 기억과 망각, 가해와 피해, 책임과 무책임 등의 이항 언어들이 언설공간을 구성했다.

한편 탈냉전의 맥락과 가해책임의 쟁점화는 개인과 시민의 존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체제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비정치적 영역에서 영위된 개인의 일상적 삶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군위안부, 전시 노무자와 같은 개인이 피해의 주체로서 부상하였다. 총력전체제에서 제국에 동화된 식민지인의 사상과 행동, 재조(在朝) 일본인들의 일상도 말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제국-식민지에서의 사상연쇄, 혹은 ‘학지(學知)’ 유통을 탐구하는 시선도 확산되고 있다. 개인과 일상의 층위에서 제국의 기억이 재구성되면서 ‘제국/식민지=지배/피지배’ 틀도 독점적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제국이 식민지를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제국-식민지 상에서 벗어나 비록 비대칭적이지만 제국도 식민지를 의식하는 모습까지 조명할 여지를 제공하는 ‘제국=식민지’ 틀이 상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국=세계를 살았던 일상의 기억들이 복원될 길이 열린 것이다.

언어·장소·표상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억은 말, 문자, 영상, 건축 등을 매개로 전승되면서 현재의 사유와 행동을 규율하는 지난 날의 경험/체험을 가리킨다. 역사는 이러한 기억들의

집적물이지만, 기억 자체가 역사인 것은 아니다. 기억은 현재의 소산이다. 우리가 과거의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 무언가가 현재를 규율하는 심리적 기제나 제도적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전쟁 체험이나 수용소 체험처럼 상흔(트라우마)으로서 기억되는 일도 있다. 어느 경우든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구원하려는 행위다. 현재의 관심과 사유에서 촉발되는,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재를 재구축하려는 행위다. 때문에 기억은 현재를 재구축하려는 의지와 의도에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체가 간여한다. 주체는 기억할 이유를 제시하고 기억될 목록을 정한다. 기억의 쟁점화=공론화는 성질이 다른 주체들 간에 기억할 이유와 기억될 목록을 둘러싸고 벌이는 쟁투라 할 수 있다. 기억할 이유와 기억될 목록의 제시는 현재의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기억을 낳는 현재는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기획으로 이어진다.

기억은 장소를 가지며, 장소는 기억을 간직한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생각할 때 거기에 간직된 기억을 떠올린다. 때문에 우리는 장소를 기억한다. 언어(말, 문자)와 이미지(도상, 영상, 건축 등)는 기억을 전달하는 수단이자 기억을 담지한 장소(topos)다. 수사학적 발상에서는 언어는 기억의 거처, 즉 장소(topos)다. 키케로는 “기록이 철자들로 된 표지(標識)[단어]로 구성되고 자신이 찍힌 그 매체 안에 표지 자체가 표인(表印)되어 있듯이, 그렇게 기억은 마치 밀랍처럼 장소를 사용하고 이 장소에 표상들을 철자처럼 모아 뭉을 통해서 형성된다”(『수사학』)고 말한다. 기억은 언설=말하기의 조건이다. 웅변가는 논고(論庫)에서 공통된 논거를 찾고 불필요한 논거를 버리는 판단력이 요구된다. 기억은 말하기의 소재(topic)를 제공하는 논고(topos)이자 말하기의 터전이다. 언어는 기억을 기록하는 수단이자 기억을 간직한 장소다.

공동체, 집단, 체제는 인간의 사회적 삶이 의탁하는 장소다. 이것들은 각각의 장소에 맞는 언어의 문법과 규칙을 내장한다. 개인기억은 사회화로 습득된 문법과 규칙을 통해 공공기억(집단기억)과 연결된다. 국제체제/제국체제도 기억들이 거처하는 장소다. 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제국은 제국/식민지를 운용하는 일본국가의 정책 언어와 문법, 사회적 규칙으로 구성된다. 냉전체제로 바뀌면 새로운 언어, 문법과 규칙이 생겨나지만, 제국체제에서 얻어진 습성과 심성도 일부 존속하기 마련이다. 개인이 의탁하는 신체와 이념도 개인기억을 규율하는 유력한 토포스다. 이러한 신체와 이념이 공동체/체제에 연루될 때 기억은 쟁점화된다. 제국(내지)에서 신체를 영위한 일본인과 재조(在朝) 체험을 한 일본인 사이에, 제국만 경험한 일본인과 식민지 삶을 체험한 한국인 사이에, 그리고 식민지 조선인과 디아스포라 재일한국인 사이에 기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기억의 장소에서는 과거-현재-미래의 맥락에서 시간적 회귀를 통해 현재의 자기설정이 의도되고, 국가-지역(아시아)-세계의 맥락에서 공간적 환원을 통해 현재의 정체성이 모색된다. 제국은 국민발전(시간)이라는 ‘영역화된 기억’을 세계평화(공간)라는 ‘탈영역화된 기억’(요네야마 리사)으로 확장하려는 동력을 내장하며, 국민적 집단기억을 초국가(제국) 영역으로, 제국영역을 세계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욕망을 간직한다. 제국 속 개인은 신체를 규율하는 제국의 문법과 습성에 동조/저항함으로써 제국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기억(삶과 정체성)을 축적한다. 제국체제 이후 냉전체제와 탈냉전체제에서 각각 상이한 문법과 습성이 형성되었을 때, 시간적 회귀와 공간적 환원의 감각(감성)은 굴절하게 된다. 기억의 부정·재생·재해석이 일어난다.

흔히 기억의 장소는 표상으로서 드러난다. 언어도 표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지는 표상을 보다 직설적으로 담지한다. 표상은 흔히 공동체나 국제체제와 결부된다.

표상은 공동체의 언어생활에서 저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특정 기억을 진리로 만들고자 표상을 제작하고 강제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히로시마’ ‘오키나와’ ‘야스쿠니’ 표상들은 제국 이후 전쟁과 평화, 시민과 공동체, 일본과 세계를 둘러싼, 국제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기억 만들기의 산물이다. 이 표상들 주위에 집단기억과 개인기억, 피해자 기억과 가해자 기억, 상흔의 기억과 영광의 기억, 전쟁 기억과 평화 기억 등 여러 유형의 기억들이 포진한다. 우리는 이미지=표상에 익숙해질 때 권력에 혼용된다. 제국권력은 구성원들에게 체제 유지와 확대에 필요한 표상들을 강요한다. 하지만 공동체로부터 강제된 표상과 개인이 일상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통해 상상하는 표상 사이에는 공간적 편차가 생기며, 제국 이후에는 제국의 표상과 이후의 표상 사이에 시간적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려는 표상 만들기는 기억 만들기의 핵심이 된다.

기억의 정치

기억하는 것은 정치행위다. 정치행위로서의 기억은 우선 기억의 창고에서 언어를 꺼내어 발화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라는 소박한 사실에서 자연스레 도출된다. 연설가(발화자)가 언어의 발견, 수집, 배열, 해석, 발표를 행하는 과정에는 선택과 배제의 판단력이 작용하며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관여한다. 또한 연설가는 눈앞의 청중을 대면하는 현장감과 실감성을 갖고 말해야 하는데, 이 현장감과 실감성은 정치적 행위의 중요한 근거를 이룬다. 현장감을 갖춘 선택/배제의 정치행위가 자의적일 수는 없다. 발화자는 청중의 이해 능력에 부합하거나 청중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어와 논법을 사용해야 한다. 청중의 기억 창고(공공기억)와 자신의 기억 창고(개인기억)를 대조하면서 언어를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공공기억은 사회적 권위에 의한 공

적 해석으로 성립하며, 개인기억은 사적 체험에 의존한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억으로 공공기억을 바꾸려 하거나 공공기억이 개인기억을 압도하려 할 때 기억의 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힘(설득력)이, 후자의 경우는 프로파간다와 수사학이 필요하다.

실제 세계에서 기억의 정치는 기억의 재생산과 확산을 둘러싸고 정치적 의도와 행위들이 교환되고 투쟁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억의 정치로서 상흔의 치유를 둘러싼 가해자-피해자간 쟁투를 들 수 있다. 상흔을 치유하려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심리치료사는 무대 위에 과거 기억을 재연(재현)시킴으로써 상흔을 치유한다. 퇴마시는 죽은 자의 기억을 되살려 원한을 치유하고 망각의 강으로 흘려 보낸다. 종교가들은 ‘신의 가호’와 ‘사랑’으로 상흔을 어루만진다. 하지만 현실세계의 상흔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일본제국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통해 남긴 상흔은, 전쟁위안부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가 전쟁책임 소재를 토로하고 가해책임을 지지 않는 한 치유되기 어렵다. 국가의 기억하기 — 책임소재와 사죄 방식을 말하기 — 는 기억 치유의 관건이 된다. 하지만 상흔은 피해자 측이 절실히 느낄 뿐 가해자 측은 잘 의식하지 못한다. 냉전체제에서 한일 양국이 단절된 때에는 더욱 그렇다. 체제규율이 완화되어 상호소통의 가능성이 제기될 때 기억의 정치가 작동한다. 피해자는 윤리적 정당성을 내세워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만, 가해자는 합목적적 정당성을 견지하면서 피해자의 망각을 요구한다.

국가간, 국내세력간의 인정 투쟁은 기억의 정치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다. 과거사 해석(교과서 문제)과 가해의 사죄 방식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와 일본국가 사이에서, 일본 국내세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억의 (국제/국내)정치다.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방침과 한국/중국 정부 및 여론의 반발, 일본보수파의 재반발로 성립한 이른바 ‘교과서 문제’는 기억의 국제정치를 구성한다. 기억의 국내정치는

이러한 기억의 국제정치와 연동한다. 기억의 국내정치는 자학사관을 부정하고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자국중심적 역사의 재서술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보편사적 관점에서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비판하는 진보파 사이에 침략에 대한 사죄의 방식, ‘민주주의’와 ‘평화’를 표방하는 ‘전후체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대립갈등으로 나타났다. 진보파는 제국경험과 전쟁체험을 비판적으로 구성하고 전후의 평화헌법체제를 ‘기억’의 창고에 영원히 두고자 하며, 보수파는 제국일본의 역사를 긍정하면서 미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보는 전후체제를 ‘망각’의 대상으로 삼는다. 기억의 정치는 탈냉전과 지구화에 따른 일본국가의 취약성과 불안감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

언어적 재서술뿐 아니라 표상적 재구성도 기억의 국내정치를 구성한다. 기념물, 박물관, 자료관 등 제도들은 전시물 배치, 도시공간 재편 등을 통해 기억의 생성, 환기, 공유를 꾀한다. 구성과정에는 국가/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관여한다. 시민들은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해 관(국가)이 주도하는 제도화 과정에 간여하면서 상이한 전쟁/평화 표상을 제기한다. 기억의 정치는 국가표상과 평화표상을 둘러싼 국가의식과 시민의식의 길항이며, 양자의 권력관계를 통해 제도(박물관, 전시물, 도시공간)의 표상은 형성된다. 국제정치도 연루된다. 이를테면, 히로시마 도시공간 재편은 “평화의 기호와 후기 자본주의적 번영을 원폭에 의한 파괴라는 기억 사이의 협상을 시도하는 욕망”에서 나왔고, 이 욕망은 “대량파괴무기와 전후 평화사이의 연관을 나타내는 쇼케이스로서 히로시마”를 재구성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린 것이었다(요네야마 리사).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서브컬처는 박물관이나 상징물을 통한 도시상징 재구성보다 더 효과적인 매체다. 기억의 정치는 “매체와 기억 사이의 공생적 협력관계”(Tessa Moris-Suzuki, 이헬렌) 속에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

다. 역사교과서는 애국심과 국가의식을 표방하는 보수주의 역사관을 유포시키는 유력한 매체로 여겨진다. 마스크, 교육, 문화매체(문학, 영화, 드라마) 등은 기억의 재생산과 확산을 부추긴다. 서브컬처를 매개로 한 기억의 정치에는 자본주의 상품화 논리와 소비 심리도 개재된다. 정치와 경제가 연대하면서 기억은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소비된다. 이는 기억의 생산과 소비에 합리성과 감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합리성과 감성은,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용어를 빌리자면, 사실적 지식과 인과적 관계에 기반한 ‘해석으로서의 역사’와, 상상력과 공감을 끌어내어 역사를 구성하는 ‘동일시로서의 역사’에 각각 대응한다. 기억은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규명보다는 사회적 공감을 부추기는 정치 행위에서, 공식 기록보다도 ‘국민’의 정서적 공감(애국심, 공동심)을 촉구하는 비공식 내러티브에서 더 힘을 발휘한다. 기억의 정치는 합리성을 가장하지만, 창작자와 저술가의 주관적 판단과 서술이 쉽게 허용되는 서브컬처 영역에서는 감성이 사실을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 사실과 정서적 공감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이 간극을 메우려는 기억의 창조, 기억의 형상화가 이루어진다.

제국일본의 기억: 로망·권력·규범

『일본비평』 제2호에서는 「전후일본의 제국 기억」을 대주제로 특집 논문 6편이 마련되었다. 모두 제국의 기억을 다룬 사례 분석이다. 논문들의 주제도 다양하고 사례들이 꼭 정합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사례를 통해 제국 기억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례 분석에 나타난 제국의 기억은 대체로 이념, 권력,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 낼 수 있다.

제국은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들에게는 망각의 대상이지만, 조국의 영광을

몽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정치적 낭만의 대상일 수 있다. 제국은 끊임없이 팽창하는 자기 변혁적 생물체로서 회귀할 유토피아로 상상될 수도 있다. 조관자는 「제국일본의 로망과 동아시아 민족주의: 일본낭만파에 대한 기억, 1950~1960년대」라는 논문에서 일본낭만파의 전후 궤적에 각인된 제국의 기억을 보여준다. 필자는 잡지 『일본낭만파』의 동인이었던 야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와 가메이 가쓰이치로(亀井勝一郎), 그리고 이에 동조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전후에 펼친 사상을 독해하면서 일본낭만파의 제국일본 로망이 기억되고 아시아주의 복구의 심리로 부활하는 모습을 추적한다. 필자는 전전의 일본낭만파가 반근대·반자본주의 문명비판을 표방한 ‘향토적 낭만’(향토적 민족주의)을 동아시아 민족 문화를 포섭하는 ‘제국의 낭만’(제국주의)으로, 패배와 방랑의 ‘혁명적 낭만’을 아시아 해방과 세계사 건설에 투기하는 ‘낭만적 일본’의 혁명정신으로 비약시켰다고 진단한다. 전후 다케우치와 야스다의 ‘낭만’은 민족주의와 반전운동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이념적 편향성과 탈맥락성을 드러냈고, 이와 달리 가메이는 일본낭만파를 망각하고 일본근대를 긍정함으로써 국민주체를 정립하고자 했다고 한다.

조관자는 제국 로망이 전후일본의 맥락에서 소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과 현재 사이의 간극을 예리하게 추궁한다. 이 글에서 ‘낭만’은 제국 팽창(혁명)을 상상하는 동력일 뿐 아니라 제국 이후에도 자기 독단의 감성적 근거가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야스다의 사례는 제국 로망의 전후적 전개와 서양 대 아시아의 전후적 공간 구도가 교착하는 시공간 축에서 ‘낭만’이 탈맥락적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현재의 주체를 구속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국 이후 낭만적 민족주의와 근대적 국민주의로 분화되는 모습에서 ‘낭만적 주체’, 나아가 전후일본의 행로를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언어는 기억을 간직한/재현하는 장소라 했다. 텍스트는 특정 콘텍스트

에서 발견되는 언어적 장소를 구현한다. 야스다 요주로의 저술 행위가 현재를 위해 과거의 기억을 반추하는 사례라면, 김소운의 번역 텍스트는 과거의 기억이 끊임없이 현재를 규정하는 사례다. 윤상인은 「번역과 제국과 기억: 김소운 『조선시집』에 대한 전후 일본의 평가에 대해」라는 글에서 번역수필가 김소운의 번역 행위를 문제삼는다. 필자는 일본에 조선 근대시를 번역 소개한 김소운의 언설과 일본 문인들의 김소운 예찬에 제국의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전이되고 배치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필자는 제국-식민지의 지배-피지배 권력구조를 상정하면서 김소운의 번역이 제국 헤게모니에 부응하는 언어 실천이자 정치 행위였음을 보여 준다. 김소운의 번역 행위는 제국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제국언어와 식민지 언어 간의 언어적 불평등을 극복함으로써 제국에 동화하려는 욕망의 소산이었고, 일본 문인들의 김소운 예찬에는 제국인의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추궁한다.

번역행위의 정치성과 번역예찬의 오리엔탈리즘을 추궁하는 ‘김소운 신화’ 해체작업은 제국/식민지 권력구조를 폭로하고 제국/식민지 구도에서의 문화권력을 읽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국 기억에 포섭되는 식민지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중한 발견이다. 더 나아가다면, 제국인이고 싶어하는 식민지인의 욕망—어쩌면 식민지인의 ‘로망’—이 제국 기억의 일부를 구성하고 제국 정체성에 일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력전체제에서 제국문학(‘국문학’=일본문학)에 적극 동화한 김사량과 최재서의 일본어 글쓰기를 생각한다면, 총력전체제에서 제국인/식민지인(혹은 제국인=식민지인)의 글쓰기 행위와 저항/동화 틀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국의 기억은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제국의 경험을 이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다. 제국운영의 제도/규범은 제국 이후를 규율하기도 한다. 이종구의

글 「총력전체제와 기업공동체의 재편」은 일본제국이 총력전을 수행하고자 하향적으로 조직한 산업보국회가 만들어 낸 노동행위와 노사관계가 전후일본에서 어떠한 연속과 단절을 보였는지를 검토한다. 필자는 산업보국회가 군국주의적 탄압 기구로서 기능했지만, 도구적·관료적 합리성에 입각한 노동력 관리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미군정이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했지만, 산업보국회에서 형성된 도구적·관료적 노동력 관리방식, 기업의 생애고용과 생활보장과 연공제,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 공동체적 가치관 등은 전후 노사관계의 제도와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한다. 전시 산업보국회와 전후 기업별 노조는 외형상 단절되어 있지만 조직상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종구의 사례 연구에서 강제적 단절을 시도한 미군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국체제에서 내면화된 제도와 규범이 연속성을 보였음이 확인된다. 연속성은 노동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만철경영 경험이 전후 일본정치를 규율한 사례도 있다. 전후일본의 관료정치가 전전 관료제에 연속한 것이며, 발전형 국가를 만들어 낸 국가주도형 산업정책은 전전의 국가-기업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산업보국회의 고용관행 유산을 현대일본 노사관계의 전통으로 연결시키는 인식에서 보듯이, 이러한 연속성은 제국의 기억이 전통으로 여겨질 소지를 안고 있다.

제국은 제국/식민지 차별구도, 혹은 제국=식민지 동화구도에서뿐 아니라 제국 내 차별구조를 내장한다. 만주거주 일본인과 조선거주 일본인에게 제국의 기억은 어떠한 것일까. 임성모의 논문 「전후일본의 만주기억, 그 배후와 회로」는 냉전 이후 중일 양국에서 다양한 관광행사를 통해 “식민지 시절의 회상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주 기억을 해부한다. 임성모는 통시적/공시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점령과 냉전이 ‘기억의 배후’로서 만주 기억을 규정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한편, 만주 체

험자들이 남긴 수기와 소설, 사진집과 TV다큐멘터리 등 영상매체, 그리고 단체관광이 '기억의 회로'로서 만주 체험자의 원체험을 공공 기억으로 재구축하는 실상을 조명한다. 필자는 1960년대 전반까지 일본사회에는 '피해와 항수의 기억'이라는 체험적 기억과 '식민지 침략의 침병'이라는 공공적 기억이 대립했고, 냉전체제 속에서 공공적 기억이 체험적 기억을 억제했고, 중일 국교회복과 중국 개혁개방으로 1980년대에 만주관광이 대중화되면서 만주기억은 '해방'되고 공공적 기억에 대한 체험적 기억의 도전과 만주 항수의 전면화가 진행되었음을 발견하고 있다. 아울러 회고록, 영상물, 만주관광이 국가주의적 만주 기억이나 만주귀환자의 '피해자·희생자'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식민지의 기억'보다 '제국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등 '국가/민족화'의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제국기 해외거주 일본인들이 제국 이후 본국에서 어떠한 기억의 배후와 회로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알려 주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다. 만주 귀환자들이 기억공동체에서 '희생자'로서 부각되고, '만주기억'이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억압되거나 재해석되며, 미디어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양태에서, 만주기억은 냉전체제에 의해 규정된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국적 차원에 갇힐 수 없는 만주 체험자들의 '월경적' 체험을 국민국가 틀 속에 환원시켜 버리는 관점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기억의 공시성'은 부단히 변용하는 제국의 기억을 재구성할 때 의식되어야 할, 제국의 기억을 '기억의 배후'(냉전 틀)와 '기억의 회로'(매체)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적 관점에서 '만주 기억'과 '조선 기억'을 함께 조망할 여지도 생겨날 것이다.

일본낭만파와 김소운의 사례는, 기억과 현재의 상호 규정성은 서로 다르지만, 기억들이 언어로 저술된 텍스트를 통해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시각 이미지도 기억 재현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시각적 재현은 언어보다 직설적이고

대중적일 수 있다. 임성모는 전후일본의 '만주 기억'에서 영상매체가 언어적 텍스트보다 강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근식과 이헬렌은 일본제국의 군수산업 중심이었던 구레(呉)시와 이곳에서 제작된 전함 야마토의 전후 표상을 사례로 전쟁 기억을 다룬다. 정근식의 논문「전쟁기억과 재현을 둘러싼 지역정치: 구레의 '해사역사과학관'을 중심으로」는 구레시 해사역사박물관(야마토 뮤지엄)의 건립 과정을 통해 전쟁 기억이 기념물을 매개로 부활하고 전쟁 기억이 지역정치에 의해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박물관 구상을 둘러싼 관주도의 기획경쟁 과정, 야마토함 담론과 지역정체성이 결합되는 공론화 과정, 박물관의 군사적 표상에 저항하는 지역평화운동의 세 과정을 분석한다. 필자는 이러한 지역정치 과정을 통해 기술(근대화)과 전쟁체험(평화)의 의제 투쟁,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관여 등 여러 층위의 복합적 기억 정치가 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수준의 기억과 교육/경제발전의 동기에 의해 추동된 전쟁 기념산업이 국가 수준의 군사주의로 전위되고, 지역 평화운동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시물 배치방식에서도 평화 지향의 전시 원칙과 군사주의적 메시지 사이의 괴리를 읽어내고 있다. 지역사회의 층위에서 전쟁기억의 방식과 기억 정치의 실태를 보여 준 소중한 사례분석이다.

이헬렌의 논문「전함 야마토의 유령: 전함,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기억의 형성」은 정근식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구레시와 전함 야마토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만, 서브컬처 영역에서 전함 야마토에 부여된 문화적 상징에 더 주목한다. 먼저 구레시 박물관의 지역정치에서 전함 야마토가 문화상품화와 의례화를 통해 일본의 전쟁 기억에서 용기와 기술적 난관주의를 표상하는 핵심 상징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서브컬처 영역에서 태평양전쟁을 다룬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만화 작가들이 전함 야마토의 환상을 소생시켜 전쟁을 암시하는 유령을 만들어 내는 현

상에 주목한다. 1970년대 TV애니메이션 『우주전함 아마토』에서 전함의 기억을 시각 이미지로 복원시켜 역사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고노 후미요의 최신 만화 『세상의 구석진 곳에서』가 그려 낸, 구레항 언덕에서 전함 아마토의 입항을 맞이하면서 부부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전함과 애정의 “매우 어색한” 배치—에서 일본인의 혼합 정체성을 읽어낸다.

이헬렌의 글에서 서브컬처의 시각 매체들이 전쟁기억의 대중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였고, 전쟁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전쟁/평화의 이중 정체성이 형성되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서브컬처 영역에서 “폭력으로 점철된 일상생활”을 그리려는 의식이 이미지 정치를 통해 애국심이나 국가의식으로 수렴되는 경향도 간과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에서 추진된 전쟁기념물 사업이 기억의 정치를 거치면서 국가 수준의 군사주의로 전위되고 지역의 평화운동을 약화시킨다는 정근식의 발견과도 상통한다. 박물관을 둘러싼 기억의 권력정치(정근식)와 영상물을 둘러싼 기억의 문화정치(이헬렌)를 통해 평화의 기억을 위해 제시된 시각적 내러티브들이 전쟁의 기억으로 전위되어 버리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전후일본의 제국 기억을 다루는 기획 특집의 일환으로서 김효진의 서평을 실었다. 서평 대상은 태평양전쟁과 전쟁기억을 다룬 세 권의 논문집, 후지타니 외 엮음, 『위험한 기억』(Takashi Fujitani and Lisa Yoneyama eds., *Perilous Memories: The Asia-Pacific War*), 도미야마 이치로 엮음, 『기억이 말하기 시작한다』(富山一郎 編, 『記憶が語り始める』), 갈리치오 엮음, 『예측할 수 없는 과거』(Gallicchio e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Past*)이다. 평자는 기억(memory)과 기억하기(remembering)를 구별하면서 이들 저작에 기억이 지니는 현재성과 가능성을 읽어내는 시점이 있음을 읽어낸다. 즉 이 책들이 태평양전쟁에 관한 기억이 현재의 상

황과 관심에 따라 재구성되고 재생산되며,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매개되는 방식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평자는 세 가지 논점을 정리한다. 첫째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란 명칭의 정치성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는 “시간적으로 구획된 비밀상적 폭력의 순간”(태평양전쟁)을 조명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존속하는 폭력과 잔혹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고 전쟁폭력의 구조가 전후의 정치적 배치와 지식담론을 통해 재생산된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국민국가 중심의 내러티브를 극복하는 기억의 방법론이다. 서평자 김효진은 집합기억과 개인기억 사이의 유동적 공간에서 집합적 기억하기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현 매체를 다루는 『위험한 기억』의 다학제적 방법과, 개인/사회 이분법을 전제로 특정 사회·집단의 정체성 확립에 관여하는 집합기억에 주목하는 『예측할 수 없는 과거』의 방법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간파하는 한편, “어떤 특정한 감정을 동반하는 행위”로서의 역사 말하기(기억) 탐구를 제안하는 『기억이 말하기 시작한다』의 방법론을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

전쟁 내러티브의 정치성과 내러티브의 현재성, 이를 극복할 기억의 방법론을 읽어낸 평자의 독해는 매우 정치하다. 평자는 태평양전쟁에 관한 전쟁 기억의 내러티브 형성에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기억을 말하는 방식의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는 것은 기억의 진정성을 알려면 필수적이다. 전쟁 기억이 국민국가/국제관계의 맥락에서 강조·변형·망각되고 정부권력과 지배적 내러티브의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지적이나, 한국에는 식민지 기억이 전쟁 기억을 압도하고 있어 지역의 관점에서 전쟁과 기억을 조망하는 보편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

특집 주제와 관련된 연구노트도 함께 실었다. 제국을 살았던 덕혜옹주를 다룬 권숙인의 에세이다. 권숙인은 경성 히노데(日出)소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회지에

서 옹주를 회고하는 일본인 동기생들의 기억을 찾아내고 있다. 덕혜옹주에 대한 동기생들의 기억에는 “기억의 어느 자락에 묻혀 있던, 혹은 빛바랜 역사자료 속에, 스러진 제국의 마지막 황실가족의 일원”이었던 덕혜옹주의 일상의 편린이 그려져 있다. 어렸을 적 일상과 소중한 우정과 따뜻한 인간애가 오롯이 담겨 있다. 필자는 소학교 시절 옹주의 인간적 아우라와, 일본에서의 정신질환과 불행한 결혼생활을 대비시킴으로써 제국일본의 권력과 대한제국 황실의 쇠락을 은유적으로 보여 준다. 동기생들의 기억을 통해 복원된 덕혜공주의 아름다운 일상에 간여하는 거대한 제국권력을 상상하면서 씩씩함을 금할 수 없다. 필자의 말마따나 “불편한 역사적 기억”을 복구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복구하고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일화다.

연구논단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찮게 제국의 기억과 관련되는 세 편의 논문을 실을 수 있었다. 먼저, 전경수의 논문 「니시무라 신지의 역사주의 인류학과 문화인류학적 일본학—러일전쟁에서 ‘대동아전쟁’까지」는 제국일본의 학계에서 ‘문화인류학’이란 용어를 거의 최초로 정착시킨 인류학자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의 생애와 학문을 조명한다. 니시무라는 영국 사회인류학이 기능주의를 제창하고 일본 지식사회에 진화론이 유통되는 가운데 역사문헌에 기초한 역사주의와 문화전파론의 관점에서 구미 인류학을 소개하고 인류학의 토착화에 선구적으로 기여했다고 한다. 말리노브스키의 공시적·몰역사적 기능주의에 대항하여 문헌에 기초한 ‘역사적 인류학’과 통시적인 토속학을 지향했고, 역사 자료를 발췌하고 문화인류학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문화를 통시적으로 해석하는 ‘일본연구’ ‘일본학’을 최초로 표명했다고 한다. 일본제국주의 팽창과정에서는 ‘공존공영’과 ‘사해동포’를 내걸고 협동사관을 옹호했으며, 문화인류학을 대동아공영권 구상에 투사시켜 광

역문화권 회복의 논리를 제시하는 등 ‘대동아전쟁’에 적극 동조했다는 서술도 덧붙이고 있다.

전경수의 니시무라 관찰을 통해 일본인류학이 보편이론보다는 실천적 관심이 강했고 제국일본의 팽창/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국 속에서 인류학, 나아가 사회과학이 제국지식의 실천 학문으로서 기능하고 이를 통해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일본 학문의 특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니시무라의 제국일본 인류학이 제자 손진태를 매개로 식민지 조선의 인류학에 연쇄되는 양상도 향후 규명될 수 있었으면 한다. 제국-식민지의 지적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은 제국 기억, 식민지 기억의 온전한 구축뿐 아니라 제국-식민지 체제의 지식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이경분의 논문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의 음악문화교류: 제2차 대전시기 독일에서 활동한 일본음악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활동한 일본음악가들이 독일협회(獨日協會, Deutsch-Japanische Gesellschaft)를 매개로 했던 문화교류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독일협회 문서를 통해 일본 음악가들의 독일 연주활동이 1938년 이후 늘어났고 특히 독일이 전승하는 동안에 절정을 이루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지휘자 고노에 히데마로, 오타카 히사타다, 안익태, 바이올리니스트 스바네지코, 성악가 다타카 미치코의 연주활동과 연주곡을 살펴보면 일본 전통음악이나 일본 현대음악의 연주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거의 독일 예술음악이 연주되었다. 필자는 일본 전통음악에 관해서는 독일 청중에게 이해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근대화된 일본의 이미지를 들려 주기에는 불리했을 것이라 추론한다. 또한 독일 동맹관계의 친밀성을 보여 주고 독일 음악의 위대성을 전달하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강한 비대칭적 교류였고 나치 정권의 장식물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자와 히데노리(戶澤英典)의 논문 「‘우애’ 정치의 사상과 실천—하토야마 유

키오 정권의 외교와 내정」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수상이 표방하는 '우애' 정치의 사상적 연원을 탐구하고, '우애'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하토야마 정권의 대외/국내 정책을 검토한 글이다. 도자와는 글의 후반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의 외교와 내정을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하토야마의 '우애' 정신이 지구환경에 대한 하토야마 구상,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노선을 추종한 대 러시아 우호외교, 일본우애청년협회의 식목 활동에서 발전된 중국 중시 외교로 나타날 것이며, 한반도와는 한일합병 100년을 맞아 우애외교를, 미국과는 대등한 관계 설정과 후텐마 기지 문제의 균형 있는 해결을 기대한다. 내정에서는 공생의 경제사회 건설과 공적 영역의 복원, 정치 주도의 행정·재정 개혁, 지역이 행정·재정의사결정권을 갖는 '지역주권국가의 확립'과 같은 국내정책 구상에 '자립과 공생의 원리'로 정의되는 '우애'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오히려 전반부에 있다. 필자는 가지마 모리노스케(鹿島守之助), 하토야마 이치로, 참가학회가 행위자로 기능하고, 미디어와 대중문화, 우애운동이 매개가 되어 유럽통합론자 쿠덴호프(Coudenhove-Kalergi)의 '우애' 사상이 일본에 수용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하토야마 이치로가 번역작업을 통해 쿠덴호프의 '우애' 사상을 수용하고, 하토야마 일가가 일본우애청년동지회(훗날 일본우애청년협회) 활동을 통해 우애정신을 보급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사상의 회로가 초국가적으로 작동하면서 정책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주체와 공감: 기억의 공간학

제국일본의 기억에 관한 이상의 사례 분석들은 기억하기가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희망을 말하기 위한 행위임을 보여 준다. 제국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나 제국에서 형성된 제도는 어떤 형태로 현재를 구속한다. 일본낭만파의 제국 로망(이념)이 전후일본의 새로운 맥락에서 현재를 조망하는 이념으로 반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조관자), 총력전체제에서 만들어진 산업보국회가 공동체적 가치관뿐 아니라 도구적·관료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노동력 관리방식(제도)을 통해 전후일본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종구). 제국의 기억은 현재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하고 재창조되기도 한다. 지방도시에 박물관이 건립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여러 층위의, 이념을 달리하는 행위자들 사이에 복합적인 기억의 정치(권력)가 작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정근식).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서브컬처 영역에서 현대일본 사회의 이념적 재구성을 위해 군국주의적 정신을 표상하는 제국 기억이 재창조되는 양상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이헬렌).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이들 사례는 제국의 기억이 이념·제도 영역에서는 유산으로서 작용하는 한편, 권력 영역에서는 전후일본의 특정 맥락에 의해 망각되거나 재창출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제국의 기억은 일본 자체만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종속물을 내포한 기억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김소운의 사례(윤상인)에서는 '김소운 신화'라는 제국 기억이 제국/식민지의 지배/피지배 권력 구도에서 배태된, 식민지 지식인의 동화 지향성과 제국일본의 전위된 오리엔탈리즘이 합작된 결과임을 보여 준다. '만주 기억'의 사례(임성모)에서는 만주체류 일본인들의 체험에 관한 전후일본의 공공 기억이 전후일본과 냉전체제라는 공시적인 '서사의 자장(social context of narrative)'에 규율된 기억공동체의 변모 양상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독일제국과 일본제국의 횡단적 음악교류에 드러난 프로파간다적 성격과 비대칭성(이경분)에서는 군사동맹이란 제도 하에서 예술교류가 한계를 지니며, 서양음악과 이를 수용한 일본 근대음악 사이에 제국/식민지 구도의 그림자가

잠복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공간적 차원의 제국과 식민지, 제국과 제국의 구도에서 생성되는 제국 기억은 제국인의 오리엔탈리즘, 식민지인의 동화의를 생각할 여지를 제공한다. 덕혜옹주의 일화(권숙인)는 식민지로 추락한 대한제국의 제국 기억과 일본제국의 제국 기억이 중첩될 때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낼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소학교 동시생들의 소시민적 기억에서는 제국/식민지 구도의 이념과 제도, 그리고 권력을 초월한 인간애의 보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지역통합 원리인 쿠덴호프의 우애 사상이 전후일본에 아시아주의 원리로 환유되는 모습(도자와)도 얼마간 제국의 기억으로 읽힐 만한 대목이다.

이상의 서술에서 제국 기억을 관통하는 의제로서 주체와 정체성의 문제를 떠올릴 수 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주체와 정체성을 모색하는 행위다. 시간 차원에서 제국 기억은 제국의 공동체적 가치와 국가의식을 재생시켜 현재의 자기와 일본사회를 규정하려는 주체의식이다. 하지만 일본낭만파가 드러냈듯이 기억과 현재 사이, 실제와 이념 사이에는 늘상 간극이나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간극이나 괴리는 시간 차원에서 좁혀질 수 없는, 공간 차원의 문제다. 공간 차원에서 제국 기억을 따지는 것은 어떤 장소에 거쳐하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그러한 간극이나 괴리를 이해하는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학을 제국지식의 실천 학문으로 상징하고 제국 팽창을 옹호한 제국지식인 니시무라(전경수)나, 번역을 통해 제국의 동화를 실천한 식민지 문인 김소운의 행위는 총력전체제라는 일종의 절대공동체에서 제국에의 몰입을 통해 그러한 간극이나 괴리를 해소하려 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제국 지식인, 식민지 지식인 모두 '제국 내에서' 저항 혹은 동화하려 한들, 그것이 '주체적' 결단이라 한들, 끊임없이 제국이라는 장소의 어딘가에 거처를 두고 이러한 간극이나 괴리를 의식하는 정체성을 영위하기 마련이다. 제국 속의 이러한 주체 상황은 제국 대 식민지 대결을 설정하는 '제국/식민지' 구도와 더불어

어 제국 속의 식민지를, 제국과 식민지의 비대칭적 상호규정을 상징하는 '제국=식민지' 구도를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흔히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규명을 통해 기억의 온전한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여기며,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규명을 치유의 전제로 삼는다. '기억의 시간학'이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역사가 현재의 관점에서 구성된다는 또다른 논법을 말한다. 무대 공간에서 역할 재연을 통해 가해/피해의 현실을 드러내어 상흔을 치유하는 것은 무대의 공간적 현전성(現前性)에서 가능하다. 현전의 재연=재현에는 무대가 필요하다. 무대에서의 재연을 통해 기억은 재구성되고 해석된다. '기억의 공간학'이다.

무대에서의 재연으로 기억이 치유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공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현전성은 공감의 조건이다. 공감은 기억하기의 조건이다. 눈앞의 행위에 공감할 때 기억은 의미를 갖고 되살아난다. 공감없는 기억은 무의미하며, 의미있는 기억은 공감을 간직한다. 여기서 현재의 공감을 통해 과거 기억의 공통성을 모색하는 접근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며, 이 기억은 또다시 현재의 상황을 통해 재구성된다. 기억을 말한다는 행위는 우리 내부의 감정을 소환하여 새로운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富山一郎)라는 진술은 타당하다. 기억은 공감을 얻는 감정 행위가 된다. 공감으로서의 기억을 생각한다면, "기억이 말하는" 상황의 출현이 바람직하지만, "기억을 말하는" 행위는 여전히 중요하다. 기억이 객관적 사실로서 주어지지 않는 한, 주체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말해야 하는 언어행위=정치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억의 공간학에서는 시간 속에서 기억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기억을 성찰한다. 제국 기억의 공간학은 현재의 논거 상황, 문법 상황과 제국 공간

의 그것들을 함께 성찰하면서 제국=세계를 살았던 인간들의 사유와 행위를 구성함으로써 만들어질, 시간을 초월한 공감에 주목한다. 체제 속 일상의 습관, 체제 속 인간의 고투, 초국가/초민족적 체험 등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 국민국가의 개별기억을 넘어서 동아시아 공통기억을 구성하는 것은 역사의 공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를 장소로 삼는 인식과 행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감성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동체/국가뿐 아니라 신체, 가족, 지역, 세계 중 어느 곳(들)을 자신의 사유와 행동을 위한 장소로 삼고, 그 공통의 장소 위에 공감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공감은 보편적 감성보다는 공통의 장소가 더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 역사의 공유, 기억의 공유는 공통의 장소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특집

전후 일본의 제국 기억

제국일본의 로망과 동아시아 민족주의 _ 조관자

번역과 제국과 기억 _ 윤상민

총력전 체제와 기업공동체의 재편 _ 이종구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 그 배후와 회로 _ 임성모

전쟁기억과 재현을 둘러싼 지역정치 _ 정근식

전함 야마토의 유령들 _ 이헬렌

특집서평 : 끝나지 않는 전쟁을 기억하다 _ 김효진